

보 고 안 건

“일하며 아이키우기 행복한 나라”를 위한

## 핵심과제 추진방안

2018. 7

대통령직속

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

관계부처 합동

# 목 차

|                       |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|----|
| I. 현실 진단 .....        | 1  |
| II. 정책 추진방향 .....     | 3  |
| III. 핵심과제 세부내용 .....  | 7  |
| IV. 재정소요 및 향후계획 ..... | 16 |

참고 1 : 기대효과

참고 2 : 과제별 소관부처

# I

## 현실 진단

### ◇ [인구 구조] '18년 출생아 수 32만 명, '22년 20만명 대 진입 전망

○ (현황) 역대 최저 출산율(1.05명) 및 출생아 수(35.8만 명) 기록, 출생아 수 30만명 대 진입 시점이 통계청 추계보다 18년 앞당겨짐

\* '16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(2035년 출생아/만명) : 44.2(고위), 36.2(중위), 28.6(저위)

○ (전망) '18년 출생아 수 약 32만 명, 출산율 1.0 아래로 떨어질 전망, 現 추세가 지속될 경우 '22년 이전 출생아 수 20만명 대 진입 우려

인구변화 전망 (통계청, 내부 분석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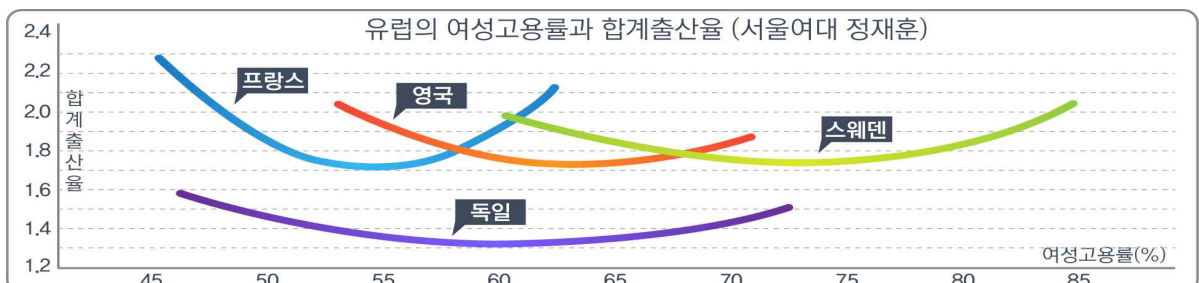
### ◇ [고비용 사회] 결혼출산 → 삶의 질 저하 → 결혼출산 기피

○ 현 사회구조 하에서 개인이 「결혼→출산→양육」의 삶의 경로를 선택 하는 경우, 높은 기회비용 발생\* → 결혼·출산 기피 현상 뚜렷

\* 주거·교육비·경력단절·장시간근로·독박육아 등 「자녀 비용 ≥ 효용」인 구조

- 특히,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에도 불구하고 출산·양육에 대한 부담은 여성에게 집중되어, 결혼·출산 포기, 경력단절 발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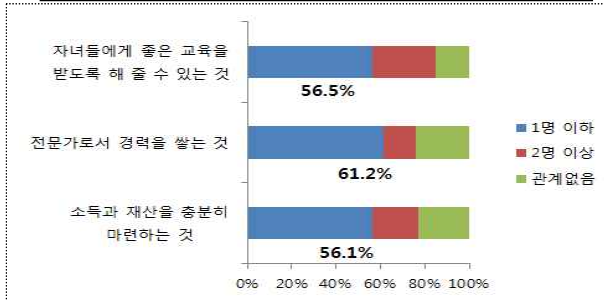
\* 유럽은 여성고용 증가 초기 출산율 하락, 사회시스템 변화가 뒷받침되면서 상승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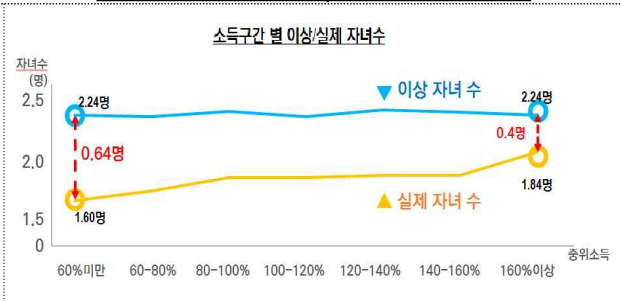
## ◇ [가족 구성] 희망하는 만큼, 가족을 이루지 못하는 상황

- (현황) 기혼 여성의 이상 자녀수는 2.25명, 실제 자녀수는 1.75명, 희망하는만큼 자녀를 낳지 못하는 상황 (15년 전국 출산력 조사, 보사연)
- (원인) 자산 축적, 경력 유지, 자녀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이상 자녀 수(2명 이상)보다 적은 자녀 수(1명 이하)를 선택
  - 특히, 소득이 낮은 계층에서 이상 자녀수와 실제 간 간극이 크게 나타나, 낮은 소득이 출산 결정을 미루는 주요한 원인으로 분석

기혼여성 인생목표 추구시 적정자녀 수



소득구간별 이상/실제 자녀 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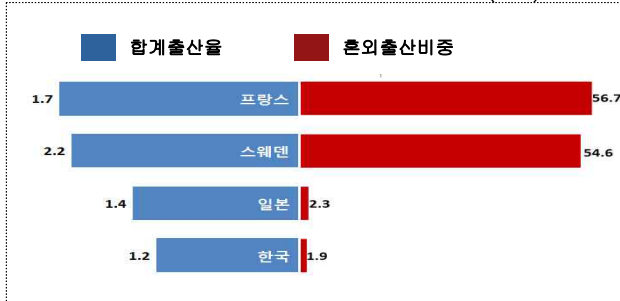


## ◇ [非 포용적 문화] 비혼 출생에 대한 부정적 인식, 포기되는 아동 다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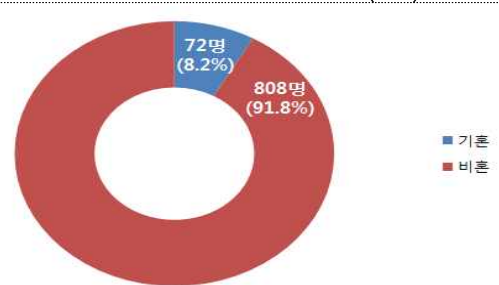
- OECD 평균과 비교시 우리나라의 비혼 출산비중은 낮은 수준\*, 출산을 포기하거나 출산하더라도 입양시키는 경우가 대다수

\* 어머니가 비혼 상태인 출생아 비율(비혼출산율): 한국 1.9%, OECD 평균 39.9% (OECD, '14)

합계출산율과 혼외출산 비중('14)



입양 아동 중 비혼모 아동('16)



- 한부모 가구 47%가 저소득(중위소득 52%이하) 가구로, 삶의 질 수준이 낮아 아동의 행복하고 건강한 성장 저해 우려

\* 한부모가구 ▲ 월평균 소득 190만원(전체대비 48.7%), ▲ 순자산 6,638만원(전체대비 23.7%)

## II

# 정책 추진방향

## 1

### 저출산 대응방향



- 특정 분야의 개별 정책만으로는 저출산 추세 완화 효과를 거두기 어려우며,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종합적 정책 마련 필요
  - 특히 청년·여성 일자리, 주거, 노동·양육 환경, 의료, 교육시스템, 모든 출생 존중 등 사회 전반에 걸친 구조개혁 필요

- ◆ (청년·여성 일자리) 안정적·양질의 일자리 확충
- ◆ (노동·양육 환경) 성 차별적 환경 개선, 워라벨 확산
- ◆ (의료 시스템)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의료비 부담 완화
- ◆ (교육 시스템) 공교육 강화, 교육비 부담 완화
- ◆ (모든 출생 존중) 비혼 출산 등 포기되는 아동이 없도록 인식·제도 개선

-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,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및 모든 출생이 존중받는 여건 조성에 역량 집중
  - 청년·여성일자리, 공교육 강화\*는 일자리위원회, 국가교육회의 등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추진과제 지속 검토
  - \* 학생 중심 교육과정 개편, 소외계층 맞춤형 교육지원, 등록금 부담 경감 등

## 2

### 최우선 추진방향

- ◇ 2040 세대의 다양한 삶의 방식을 존중하되, 결혼·출산·양육의 경로를 선택할 때 국가 지원을 강화하고, 모든 출생 존중 여건 조성
- ◇ 결혼·출산·양육이 개인(특히 여성)의 희생·부담이 되지 않도록 2040 세대의 삶의 질 보장 및 양성평등한 노동·양육 환경 마련 주력

#### ◇ [정책목표] 2040 삶의 질 개선 및 양성평등한 노동·양육 여건 확립

- 여성 고용율('16) 58% → ('22) OECD 평균 64% \* 독일 74%
  - \* 여성 고용의 양적 확대 뿐 아니라 질적 제고도 병행 추진
- 삶의 질 지수\*('17) 29위 → ('22) OECD 평균, 15위 \* 독일 13위
  - \* 만족도, 주거, 워라벨 등 종합평가한 OECD 더 나은 삶의 질 지수(BLI) 목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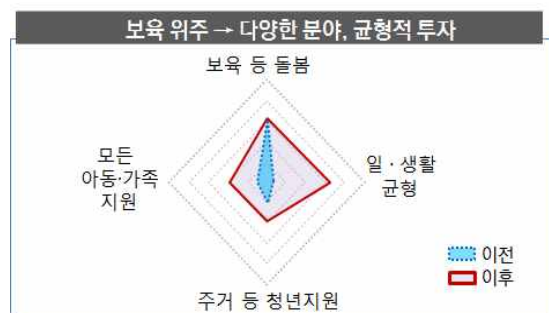
#### ◇ [자원배분] 목표달성을 위한 적정투자, 균형적 자원배분 추진

- 아동·가족 지출을 늘리고, 보육 외 청년 지원, 일·생활 균형 등 다양한 분야에 균형적 투자 추진

정책  
목표



재원  
배분



## ◇ [추진방향] 2040 평등한 출발, 워라밸 등 5대 개혁 추진

### 1. 출생부터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

(출생 아동) 출산휴가급여 사각지대 해소, 1세 아동 의료비 제로화 및 임산부 부담 경감  
(영유아·초등학생) 촘촘한 초등돌봄, 공보육 확충, 가정·공동체 돌봄 강화

### 2. 아이와 함께하는 일·생활 균형

(아이 함께) 임금 삭감없는 육아기 근로시간 1시간 단축  
(아빠 함께) 남성 육아휴가·휴직 사용 확산  
(중소기업 함께) 청년이 일하고 싶은 워라밸 중소기업 확산

### 3. 모든 아동과 가족에 대한 차별없는 지원

(한부모 지원) 아이 낳고 키울 수 있는 여건 조성  
(비혼 출산·양육) 동등하게 대우받는 여건 확립

### 4. 청년의 평등한 출발 지원

신혼부부 주거 지원 방안 \* 청년일자리, 청년대책은 별도 수립

### 5. 제대로 쓰는 재정, 효율적 행정지원체계

#### 정책 변화 방향

(지금까지는)

(앞으로는)

|          | (지금까지는)               | (앞으로는)                |
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
| ① 목표     | 출산율·출생아 수             | 2040 세대 삶의 질          |
| ② 접근방식   | 출산장려 캠페인 → 국가주도 인식 개선 | 제도·구조 개혁 → 개인의 합리적 선택 |
| ③ 타킷 대상  | 육아기 부모 저소득 위주         | 청년, 아동, 여성 행복 서민, 중산층 |
| ④ 정책 주안점 | 보육                    | 주거, 워라밸 강화 모든 출생 존중   |
| ⑤ 실천 전략  | 새로운 제도                | 제도 활용 문턱 완화 실천에 중점    |

#### 【참고 : 유럽의 출산 정책, 선진국이 택한 해법】

- ▶(여성을 행복하게) 일·생활 균형, 탄력근무제 확대 등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확대
- ▶(정부지출의 적중률 제고) 사적양육부담 감소, 공보육 등 선택과 집중
- ▶(인센티브를 넘는 법적의무 부여) 성 역할 규범이 강한 사회에 필요에 육아휴직 남성 할당제

## <참고> 과제 선정과정 및 논의경과

- 위원회 논의(27회), 관계부처 작업반 운영(10회), 전문가 논의 및 현장 소통 등을 거쳐 대책(안) 마련

| 추진체계   | 주요 논의경과   |
|--|---|
| <p><b>위원회</b></p> <p>* 방향 설정</p>      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본 위원회 : 2회</li> <li>▶ 정책운영위원회 : 3회</li> <li>▶ 분과위원회 : 19회</li> <li>* 미래분과 5회, 인구재정분과 4회, 일·생활균형분과 4회, 문화혁신분과 3회, 지역분과 3회</li> <li>▶ 파워블로거 등 홍보 자문단 : 2회</li> <li>▶ 위원회 워크숍 : 1회 * 저출산·고령사회 현안 진단</li> </ul>  |
| <p><b>관계부처<br/>작업반</b></p> <p>* 세부과제 논의</p>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부위원장 주재 관계부처 실장 작업반 운영 : 7회</li> <li>* 국무조정실, 기재부, 교육부, 복지부, 노동부, 여가부, 국토부 참여</li> <li>▶ 일·생활 균형 관련 관계부처 작업반 운영 : 3회</li> </ul>  |
| <p><b>전문가<br/>논의</b></p> <p>* 방향 및 과제<br/>적정성 자문</p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월간 포럼 (전문가 참여 토론회)</li> <li>* (2.28) 한국사회 무엇을 할 것인가, (3.16) 기본계획 재구조화 추진방향 등</li> <li>▶ 3차 기본계획 보완 연구 (보사연, '17.12~'18.3)</li> <li>▶ 가족 다양성 TF 구성·운영 : 4회</li> <li>▶ 그 밖에 전문가 자문단 수시 운영</li> </ul>   |
| <p><b>현장 소통</b></p> <p>* 실현가능성,<br/>국민체감도<br/>점검</p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2040 청년 의견수렴</li> <li>* 젊은 생각을 듣는 사람들 미팅('18.2.23, 3.21), 청년소통 행사(3.29) 일자리, 주거, 양성 평등 과제 의견수렴</li> <li>▶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, 육아기 근로자 등 대상 숙의토론</li> <li>* 초등 학부모 대상 돌봄 정책 토론('17.11), 육아기 근로자 대상 일·생활 균형 정책토론('17.12)</li> <li>▶ 현장 민원공무원 의견 수렴 ('18.3.29~4.2)</li> <li>▶ 일·생활 균형 관련 현장 방문 및 간담회 : 11회</li> <li>▶ 돌봄 관련 현장 방문 및 간담회 : 5회</li> </ul> |



### Ⅲ

## 핵심과제 세부내용

### 1

### 출생부터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

| 출생   | 영유아   | 학령기 아동   |
|--|---|--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출산휴가급여 사각지대 해소</li> <li>▶ 출생 후 1년간 의료비 제로화</li> </ul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공보육 40%</li> <li>▶ 아이돌보미, 공동육아나눔터 등 틈새없는 사회적 돌봄</li> </ul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초등 은종일돌봄</li> </ul> |

#### ◇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휴가급여 사각지대 해소

- (필요성) 정규직과 달리 단시간·특고, 자영업자 등은 고용보험 미적용 또는 요건 미충족\*으로 출산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임
  - \* 수급요건(피보험단위기간 180일) 미충족
- (주요내용) 특수고용직,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미적용 취업 여성을 대상으로 90일간 월 50만원의 출산지원금 지급
- (기대효과) 연간 약 5만명의 여성근로자와 출생아의 수혜 예상

#### ◇ 1세 아동 의료비 제로화 및 임산부 부담 경감

- (필요성) 임신·출산 후 과정의 산모·아동의 건강 관리가 모성 보호 및 아이의 건강한 성장과 직결
- (주요내용) 1세(~출생 후 1년) 아동 의료비 제로화 및 임산부 지원 강화
  - ① 1세 아동 의료비 제로화
    - (건강보험 본인부담) 외래 진료 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(21~42%→ 5~20%)
      - \* 외래진료비 건강보험 본인부담 16.5만원→ 5.6만원(△10.9만원, △66%, '19. 환산 기준)

- (국민행복카드 지원 확대) 지원금액 10만원 인상(50만→60만원/ 쌍태아 90→100만원), 사용기간 확대(신청일부터 분만예정일 후 60일→1년까지)
  - \* 국민행복카드 지원액은 임신·출산 진료비 뿐 아니라 1세아 의료비로도 활용 허용
- (비급여→ 건보적용)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검사(50여종), 난청선별검사, 상급병실 등 임신·출산, 아동 치료에 필수적인 비급여는 우선 급여화
  - \* 중위소득 180% 이하의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·난청 선별검사(외래)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분은 건강증진기금으로 지원 (본인부담 0)
  - \*\* 본인부담 경감, 국민행복카드 확대, 비급여 급여 전환은 건정심 보고를 거쳐 최종 확정

## ② 임신부 의료비 지원 강화

- 고위험 산모의 비급여 입원진료비 지원 질환 확대(5→11개)
- (기대효과) ▲질환 확대(6종) 고위험 산모 5,000명, 비급여 입원진료비 52만원 경감 ▲1세 아동 외래 진료비 현행 대비 평균 66% 경감

## ◇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 확대

- (필요성) 산모·신생아의 건강 관리 필요성은 높으나, 서비스는 산후조리원 등 민간에 대부분 맡겨진 상황
  - 산후조리원은 高비용, 산모·신생아 감염사고 발생 등 안전문제 취약
    - \* 산후조리원 비용 최저 123만원, 최고 2,000만원 (28.6배), 산후조리원 전염병(산모, 신생아) ('13) 101명→ ('16) 489명 / 4.8배
- (주요내용)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않아도 최소 비용으로 가정에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\* 지원대상 확대\*\*
  - \*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, 산모 산후조리·신생아 양육 서비스 제공,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 절감 및 질병 감염 위험 완화
  - \*\* (현행) 기준중위소득 80% → ('19) 100%
- (기대효과) 산모·신생아 3.7만명 추가 지원, 일자리 약 4천명 추가 확충('19)
  - \* 수혜자/일자리(명): (현행) 8만/1.4만→ ('19) 11.7만/1.8만

◇ **[촘촘한 초등돌봄] 학교 안팎 온종일 돌봄 20만명 확대** \* 기 확정

- **(필요성)** 영유아와 달리 초등생 방과후 돌봄공백 심각
  - \* 공적돌봄 이용률: 영유아 68.3% vs 초등학생 12.5%
- **(주요내용)** 학교 안팎 온종일 돌봄체계 확충
  - **(학교돌봄)** 학교 내 돌봄공간 확충 및 1~2학년 위주 초등돌봄을  
    **全 학년으로 단계적 확대, 10만명(현재 24만명) 증원**
  - **(마을돌봄)** 취약계층 위주에서 보편적 돌봄 지원으로 범위 확장 및  
    지역공공시설 활용 '다함께 돌봄' 추진으로 **10만명(현재 9만명) 증원**
- **(기대효과)** 초등돌봄 공급 확충 및 부처간 연계 강화를 통해 빈틈없는  
    통합 지원 가능

◇ **[공보육 40%] 국공립 어린이집·유치원 확대, 만족도 제고** \* 기 확정

- **(필요성)** 국공립 시설 이용 수요 대비 공급은 여전히 부족한 수준
- **(주요내용)** 국공립 어린이집·유치원 등 공보육 확충
  - **(어린이집)** 국공립 매년 **450개소** 이상, 직장 매년 **135개소**
  - **(유치원)** 5년('18~'22)간 국공립 학급 **2,600개소** 이상 추가 신·증설
  - **(만족도 제고)** 양질의 보육·교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어린이집  
    **평가제 의무화(평가인증→평가제)** 및 어린이집·유치원 **공통 평가 실시**
- **(기대효과)** 국공립 확대, 질 제고 등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

## ◇ **(틈새없는 돌봄) 가정, 공동체 돌봄으로 사각지대 보완**

- **(필요성)** 보육서비스 확대 노력에도 불구하고, 시설이용 곤란하거나 돌봄 수요 집중시간, 질병 감염 등 긴급 시에 사각지대 발생
- **(주요내용)** 아이돌봄서비스 및 공동육아나눔터 확대·강화
  - **(아이돌봄서비스)** 지원 대상 확대, 요금부담 완화, 돌보미 공급 확대, 실시간 신청·대기 관리시스템 구축 및 질병감염 아동 긴급돌봄 강화
    - \* (지원대상) 중위소득 120→150% 검토, (요금 부담) 정부지원율 최대 80→90% (돌보미 공급) 2.3만→4.3만명, (긴급돌봄) 연 5천→1만명
  - **(공동육아나눔터)** 돌봄사각지대 보완\*, 돌봄부담 완화 등을 위해 육아소통공간\*\* 및 은퇴교원, 돌보미 등 활용한 돌봄공동체 조성
    - \* 6세 이하 돌봄시설 미수용 아동 약 60만명(시설 이용시에도 야간·주말 등 돌봄수요 증가)
    - \*\* ('18)113 → ('19)160개 시군구로 확대(미설치 지역, 6세 이하 아동 밀집지역 중심)
  - **(자격관리)** 민간을 포함한 아이돌봄서비스 품질 및 신뢰도 제고 등을 위한 국가자격제도 도입 등 검토(중·장기)
- **(기대효과)** 가정 내 돌봄서비스 및 지역 내 직접 돌봄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부모들의 부담 완화

2

아이와 함께하는 일·생활균형

◇ [아이 함께] 임금 삭감없는 육아기 근로시간 1시간 단축

- (필요성) 현행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육아휴직 1년을 모두 사용한 경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없는 등 실제 활용에 한계
  - \* 사업주(비용, 대체인력 부담 등) 및 노동자(눈치보기, 임금 감소 등)가 사용하기에 부담
- (주요내용) 임금 삭감없는 일 1시간 근로시간 단축 추진, 최대 2년 간 근로시간 단축 사용 허용 <남녀고용평등법 개정>

| 구분   | 현행   | 개선  |
|------|--|---|
| 단축시간 | 일 2~5시간(주 10~25시간)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일 1~5시간(주 5~25시간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사용기간 | 육아휴직과 합산하여 최대 1년<br>* 육아휴직 1년 사용시 근로시간 단축 불가 | 육아휴직과 합산하여 최대 2년<br>* 기본 1년 + 육아휴직 미사용기간= 최대 2년 |
| 임금지원 | 통상임금 80%(상한액 150만원)                          | 최초 1h/일 단축 시 통상임금 100% (상한액 200만원)              |

- (기대효과) 제도 사용이 용이하도록 개선, 중소기업 육아기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확산(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 8천명 확대 예상)
  - \* 근로시간 단축은 육아휴직 사용 여건이 어려운 중소기업에서 주로 사용(전체의 75% 수준)

◇ [아빠 함께] 남성 육아휴가휴직 사용 확산

①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

- (필요성) 육아휴직 시 소득대체 수준이 낮고, 육아휴직이 자유롭지 못한 기업문화 등으로 남성 육아휴직 참여율이 낮음
- (주요내용) 급여 지원 확대\* 등을 통해 자율 사용 유인(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) 및 “아빠 육아휴직 최소 1개월” 사용 기업 단계적 확산 추진
  - \*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소득대체율 100% (상한: 200→250만원)

“아빠 육아휴직 최소 1개월” 단계적 확산방안

|                   |   |
|-------------------|---|
| 중앙정부, 지자체<br>공공기관 | 기관별 목표치 설정 → 실적 공개<br>→ 평가*(정부업무·자치단체 합동·경영)에 반영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| 대규모·가족친화인증기업 등 동참(조달·입찰 가점, 정부포상<br>우대 등), 민간우수사례 지속 확산 |
| 일반기업              |   |

- (기대효과) 남성 육아휴직자 수 현재 대비 2배로 증가\*  
\* 1.2만(육아휴직자 대비 남성 비중 13%) → 2.4만(20% 내외), 독일 24.9%

## ②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

- (필요성) 출산 직후 배우자가 함께 산후 관리와 양육을 경험토록 하여, 자연스런 남성의 육아 참여 유도 및 긍정적 가족 관계 형성에 기여  
\* (전문가 의견) 낮은 소득대체 수준, 보수적 기업문화 등 감안 시,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가 남성 육아 참여에 보다 효과적
- (주요내용)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기간 확대 및 유급 사용분 정부 지원 (통상임금 100%, 상한 월 200만원), 사용시기 유연화 등 선택권 강화

| 구분    | 현행                | 개선 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
| 사용 기간 | 5일(유급 3일 + 무급 2일) | 유급 10일         |
| 정부지원  | ×                 | 중소기업 5일 분 정부지원 |
| 청구 시기 | 출산한 날부터 30일 이내    |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 |
| 분할 사용 | 원칙적 불가(노사합의 시 가능) | 1회 분할사용 허용     |

- (기대효과) 최대 20만 명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목표, 남성 육아참여 활성화

## ③ 육아휴직 부모 동시사용 (비예산)

- 동일 자녀에 대한 부·모 동시 육아휴직 사용으로 남성이 함께 육아 할 수 있는 여건 확립 <남녀고용평등법령 등 개정>

## ◇ [중소기업 함께] 청년이 일하고 싶은 워라벨 중소기업 확산

- (필요성) 근로자 대다수가 300인 이하 중소기업에 근무 중, 2040 세대는 소득보다 일·생활 균형(워라벨)을 선호하는 경향  
\* '18. 2월 현재 300인 이하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전체 82.5% 수준, 2040 세대의 58.3%, 워라벨이 좋다면 연봉이 낮아도 이직의사 有

- (주요내용) 중소기업 일·생활 균형 확산을 위한 다각적 지원 추진
  - ① (지원금 인상) 중소기업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 인상을 통해 기업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활용(신규채용, 업무대행자 지원, 노무비 등)하도록 지원
    - \*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: 월20→30만원
    - 대체인력지원 인수인계기간 기준 확대(15일→ 2개월) 및 인수인계기간 중 중소기업 지원단가 인상(60→ 120만원)
      - \* <예 : 대체인력을 육아휴직 2개월 전부터 육아휴직 후 6개월까지 고용한 중소기업>
        - (기존) 월60만원 × 1/2월(15일) + 월60만원 × 6개월 = 390만원
        - (개선) 월120만원 × 2개월 + 월60만원 × 6개월 = 600만원
      - 취약업종 중심으로 업종 특성에 맞는 지원 대책 마련(업종별 협회 등 활용)
        - \* (예시: 보건업) ① 이직률 해소를 위한 근무환경 개선, 법정 근로시간 준수 ② 간호관리료 상향·등급 세분화 ③ 임신순번제 해결을 위한 근로감독 강화 ④ 4조 이상의 교대제 ⑤ 재취업 지원
  - ② (인센티브 지원) 가족친화인증기업\* 등 일·생활 균형 우수기업 인센티브\*\* 지원을 강화하여, 일·생활 균형 우수기업 육성
    - \* 가족친화인증 희망 중소기업 대상 컨설팅·사후관리 확대('18. 2천→ '19. 3천), 사후관리 강화(2~3년마다 유효기간 연장 및 재인증 → 1년마다 시스템 입력)
    - \*\* 인증기업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등 검토
  - ③ (감독·인프라 강화) 지방노동관서 내 워라벨 종합지원서비스 구축\*, 사업주 컨설팅 및 건강보험 정보 등과 연계한 스마트 근로 감독 강화
    - \* 지방노동관서 내 일·생활 균형 전담 조직 및 인력 확충
  - ④ (인식 개선) 일·생활 균형이 사회 전반적인 가치로 자리잡도록 예산을 확대·투입하여 캠페인 집중 추진 및 지역사회 확산 병행
    - \* (캠페인) 쏠사회 실천서약식 등 대대적 홍보(18→ 37억 원, 2배 증액)
    - (지역확산) 일·생활 균형 지역 추진단 확대·운영(6→17개소), 지역 지표 개발 등
- (기대효과) 중소기업 일·생활 균형 문화 확산, 청년이 가고 싶은 워라벨 중소기업 2만개 육성

## ◇ [한부모 지원] 아이 낳고 키울 수 있는 여건 조성

- (필요성) 비혼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열악한 양육여건 등으로 직접 양육이 어려워 유기, 입양 등을 선택하는 현실 개선 필요
- (주요내용) 한부모의 자립을 위한 아동양육비 현실화
  - 지원대상 자녀연령 14→18세로 상향(8만→10만 명) 및 지원액 인상 (13→17만원/청소년 18→25만원)
- (기대효과)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을 강화하여 자립할 수 있는 여건 조성

## ◇ [비혼 출산·양육] 동등하게 대우받는 여건 확립

- (필요성) 비혼 출산·양육에 대한 사회적 편견, 차별 등으로 비혼 출산을 선택하기 어려운 현실
- (주요내용) 불합리한 제도·문화 개선 및 통합 상담·지원 강화
  - (제도 정비) 법령(가족관계등록법, 민법 등), 서식 및 지원 절차상 혼인여부 등에 따른 차별 및 불합리한 제도 발굴·개선 추진
    - \* 부(父)가 자녀 인지시 원칙적으로 종전 성(姓) 사용하도록 법개정 추진('18.下), 주민등록표상 계부·계모 등 표기 개선('18.下), 사실혼 부부 난임시술 지원('19년) 등
  - (문화 개선) 사회적 편견, 낙인 등 일상 속 차별 사례 발굴해 포용적 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·캠페인 전개 및 반편견 교육 강화
    - \* 모바일 차별 경험 접수 창구 개설('18.下), 학생 비혼모의 위탁교육기관 이용범위 전국 확대 추진('19년), 신규교원 연수시 반편견 교육 강화('19년) 등
  - (통합 지원) 비혼모 등 경제·사회적 어려운 상황의 임신·출산·양육 관련 통합적 문제해결을 위한 원스톱 상담창구 운영
    - \* 24시간 위기 임신·출산 상담, 관련기관 연계, 종합정보제공 등



- (조사·연구) 동거가족, 비혼모·부 등 현황, 지원욕구 등 파악하기 위한 연구 및 통계 구축 등 추진

\* 출생신고 제도 개선 관련 조사·연구, 혼인 외 출산·양육의 차별 제도 발굴·개선 연구, 동거 관련 통계 구축 등

○ (기대효과) 모든 출산이 존중받고 어떤 아동이든 동등하게 대우 받도록 포용성을 제고하는 제도 개선 및 사회적 분위기 조성

#### 4 청년의 평등한 출발 지원 : 신혼부부 주거 지원

※ 주거지원 방안은 별도 발표 예정

#### 5 제대로 쓰는 재정, 효율적 행정지원체계

##### ◇ [재정] 워라밸 집중 지원을 위한 재원 확충

○ 고용보험기금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고 지원 확대

##### ◇ [행정지원체계] 조직인력 신설강화 및 행정지원체계 효율화

○ (조직·인력) 지방노동관서 내 일·생활 균형 전담 조직 및 인력 확충, 중앙정부-지방정부 간 인적 네트워크 등 거버넌스 강화

○ (정보 플랫폼) 결혼, 임신, 출산, 육아 정보부터 상호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고용, 주거, 교육과 관련된 정보 통합 구축

\* 일·생활 균형, 고용, 출산양육 시설, 재정, 인구통계 등

## IV

## 재정소요 및 향후계획

### ◇ [재정소요] '18년 대비 약 9천억원 증가 \* 주거대책 제외 금액

- 출생부터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에 약 5천억원 소요
- 아이와 함께 하는 일·생활 균형에 약 3천억원 소요
- 모든 아동과 가족에 대한 차별없는 지원에 약 700억원 소요

\* 구체적 예산은 내년도 정부예산안 마련 시 확정 예정

### ◇ [향후계획] 위원회 심의·의결을 거쳐 확정·발표

- 본 위원회 심의·의결
- 내년도 정부예산 반영 및 필요시 법 개정을 거쳐 '19년부터 시행 추진

## 참고 1

## 기대효과

| 구분 | As-Is (현행)<br>*삶의 질 지수 29위 | To-Be (목표, '22)<br>⇒OECD 평균(15위 내외)<br>* 독일 13위, 프랑스 18위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

### ① 출생부터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

|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
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
|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-                           | 5만 명 (고용보험 미적용 소근로자)  |
| 고위험 산모 의료비 지원 질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5종                          | 11종                   |
| 1세 아동 외래진료비 건강보험 본인부담액<br>* '17년 자료를 '19년 기준으로 환산하여 산출 | 16.5만 원                     | 5.6만 원(△66%)          |
|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수혜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8만                          | 11.7만 명 * ↑ 1.5배      |
| (초등)학교 안팎 온종일돌봄 이용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33만                         | 53만 명 * ↑ 1.6배        |
| (영유아) 공보육 이용율  | 국공립 어린이집 13%<br>국공립 유치원 25% | 40% 국공립 어린이집·유치원 각40% |
| (아이돌보미) 이용아동 수   | 9만                          | 18만 명 * ↑ 2배          |

### ② 아이와 함께하는 일생활균형(워라밸)

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|
| <b>아이 함께</b>            |            |   |
|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           | 0.3만       | 8천 명 * ↑ 3배   |
| <b>아빠 함께</b>            |            |   |
| 남성 육아휴직자 (휴직자 대비 남성 비중) | 1.2만 (13%) | 24만 명 * ↑ 2배 (20% 내외)<br>* 독일(24.9%)~핀란드(18.7%) 수준 목표 |
| <b>중소기업 함께</b>          |            |   |
| 워라밸 중소기업                | -          | 2만 개  |

### ③ 모든 아동과 가족에 대한 차별없는 지원

|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|
|-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|
| 한부모 양육비 지원 대상아동 연령 | 14세 | 18세 |
|-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|

### ④ 청년의 평등한 출발 지원

### ⑤ 제대로 쓰는 재정 / 효율적 행정지원체계

**참고 2**

**과제 소관부처**

| 구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과제 명                      | 소관부처              | 법 개정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
| 출생부터<br>아동의<br>건강한 성장<br>지원    | 고용보험 未 가입자 출산지원금          | 노동부               | -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세 아동 의료비 제로화 및 임산부 부담 경감 | 복지부               | -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확대     | 복지부               | -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학교 안팎의 온종일 돌봄체계 확립        | 교육부<br>복지부        | -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국공립 어린이집 유치원·어린이집 확대      | 교육부<br>복지부<br>노동부 | -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가정, 공동체 돌봄으로 사각지대 보완      | 여가부               | -                |
| 아이와<br>함께하는<br>일·생활균형          | 임금 삭감없는 육아기 근로시간 1시간 단축   | 노동부               | 남녀고용평등법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남성 육아휴가·휴직 사용 확산          | 노동부               | 남녀고용평등법<br>고용보험법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청년이 일하고 싶은 워라벨 중소기업 확산    | 노동부<br>여가부        | -                |
| 모든 아동과<br>가족에 대한<br>차별없는<br>지원 | 한부모 지원 강화                 | 여가부               | -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비혼 출산·양육이 동등하게 대우받는 여건 확립 | 여가부 등             | 민법 등             |
| 제대로 쓰는<br>재정/<br>효율적<br>행정지원체계 | 워라벨 집중 지원을 위한 재원 확충       | 기재부<br>노동부        | -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결혼에서 육아까지 통합 정보망 구축       | 행안부               | -                |